

보일러 시공업 생존방향은 -

“불법시공 차단 · 단일업종 한계 극복”

지속적인 내수경기 및 건설경기 침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 개보수시 및 신축시기 연장 등으로 건설시공 수요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시공업계 전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의 “MF때도 이보다 힘들지 않았다”라는 말은 현재 시공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말일 것이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공업계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자 박기준 전국보일러시공협회 회장과 신현석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과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보일러 시공업계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박기준 회장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무등록자 때문에 더 힘들어

보일러시공업은 한때 가장 잘 나가는 업종 중 하나였다. 처음 보일러라는 생소한 제품이 보급될 당시만 해도 시공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부족한 것도 있었다.

현재 보일러시공 유경험자에 대한 양성교육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난방시공기술자격자 제도로 많은 시공업자가 배출돼 있다. 현재 보일러시공업계가 추산하는 시공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보일러시공업은 보일러 시장 형성과 밀접하게 성장해 왔다.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또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변해가는 보일러시장 성장에 한

축을 형성해가며 성장해 온 것이다. 사실 보일러가 처음 보급될 당시 보일러 시공업을 했던 시공업자들을 보면 번듯한 건물을 올린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당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던 보일러시공업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변화되는 시장에 맞춰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뒤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무등록자 근절 위한 행정력 강화해야

박기준 회장은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뉴타운 건설과 재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노후건물과 난방관련시설의 개보수와 보일러의 교체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거리가 없어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이때 다른 실질소득 감소로 많은 시공인들이 시공업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어렵다보니 일부 시공업자들은 시공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업자들은 불법으로 보일러 시공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시공업계에서 말하는 일명 ‘무등록자들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신현석 회장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아직도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회원사들의 업역까지 침해 받고 있어 우리 회원사 및 시공업계가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공업계는 무등록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2003년 3월 건설산업기본법 중 무등록자 표시 및 불법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무등록자 단속법이 공포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무등록자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소비자보호에 앞장섰다.

신현석 회장은 “회원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등록자의 시공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가스지역관리소와 상호협력 방안을 추진, 이의 철저한 시행을 통한 편법, 불법적인 확인서 대여 등을 철저히 차단해 시공업계의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가 건축물의 준공시 첨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등록자의 불법시공을 막기 위한 관련법규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했던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시공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세금을 내면서 시공하는 업자와 무등록시공업자간 경쟁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도 시공업자들이 등록인지 무등록업자인지 잘 알지 못한다.

박기준 회장은 “지금과 같이 불법시공을 단속할 수 있는 행



신현석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

정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간혹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고작 20~3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고발이 되는 경우에도 불법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박기준 회장은 “먼저 단속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반자는 법률적용을 보다 엄격히 해 불법시공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시공업의 자위적 차원에서 불법시공자를 고발하는 철저한 시민정신이 발휘될 때 불법시공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석 회장은 “무등록 시공의 경우 직접 시공을 하는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자격증 대여 쌍방간의 짜맞추기 등 입증 자료 확인과 지역사회이다 보니 철저한 신고정신 미흡 등의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 “일선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의지와 유관기관 및 단체가 공조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무등록 시공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등록시공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기관, 언론사에서 무등록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